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전남과 함께 자치현장 Talk'

“재정 열악한 전남 특별교부세 지원” “자치경찰제 충분히 검토 후 추진을”

전남도 등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을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교부세를 주고, 지자체가 관광세 등 지역에 맞는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무안군 삼향읍 전남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의 '전남과 함께 자치현장 토크(Talk)'에서는 지방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지정토론에 나선 전남발전연구원 이진철 원장은 “지방세 수입의 지역간 격차가 심한데 대부분 사업이 정부 일부 지원과 지자체 부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난한 지역이 사업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생긴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수도권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최근 발표대로 국제 수입을 일부 지방에 이양하더라도 국제 징수율이 낮은 전남은 오히려 재정이 힘들어지게 된다”면서 “농어촌지역

특별지원, 남해안개발 특별교부세 등 한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헌법 개정도 요구됐다. 이 원장은 “헌법 제59조에 조세법률주의가 명문화돼 있어 지역 재정에 도움을 주는 새로운 세원을 개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 개정을 통해 조세로 새로운 세원을 만들 수 있게 해 누시세, 탄소세, 레저세 등 세원을 늘리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권경석 부위원장은 “헌법 개정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현재 목포·순천시 일대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주민 자치회의 원활한 운영과 자치경찰제 도입 문제 등도 중점 논의됐다.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강인호 교수는 “하나의 주민자치회 모델을 제시해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델을 지역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광주일보 박지경 편집부장은 “경찰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필요는 있다”면서 “도입 전에 자치경찰의 업무 영역과 예산 마련 방안, 중립성 확보 방법, 객관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치경찰을 광역, 지자체에 각각 설립할 것인지와 업무 영역과 재원 마련까지를 충분히 검토한 뒤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의회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국령에 전 전남도의원은 “의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교육훈련기관을 두고, 각 정당이 지방의원연구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면서 “의정 활동이 불성실한 의원은 의정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페널티를 부여하고, 지방 의회 비례대표도 주민소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심대평 위원장 “지방교부세 법정률 22~23%로 올리면 지방재정 나아질 것”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 <사진>은 26일 “세수의 지역간 양극화가 심각하다. 각 지역의 재정력을 감안해 3등분으로 차등지급하고 있는 교부

세와 같이 세수 불균형도 유사한 방식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남과 함께 자치현장 토크(Talk)' 참석차 전남도청을 방문한

심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2~23%로 끌어올리면 지방재원이 풍부해지고 결국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 규모를 6대 4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다. 심 위원장은 “현재 19.9%에 머물고 있는 지방재정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40%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군 통합과 관련해 “지역주민이 결정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주민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심 위원장은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군·구 통합계획은 “행정 효율성과 경제성, 동일한 생활권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중북몰이 그만” 진선미·임내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중북몰이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북 ‘블랙홀’

천주교 사제단 발언 이후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실종되고 온 나라가 보수·진보 이념 논쟁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미사 발언이 모든 정치적 쟁점을 물어버리고 정치권의 블랙홀이 돼가는 양상이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은 사라지고 ‘중북(從北)’ 논란만 남아 국회는 물론 시민·사회·종교단체까지 온 나라가 진보·보수로 뒤엉켜 이념 논쟁을 하면서 민생은 외면받고 있다. 특히 청와대까지 이 같은 논란에 가세하면서 대선 정국은 연말을 넘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북’ 프레임=이번 여야 대선 정국은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야당의 의혹제기에서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 국가보훈처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과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추가되면서 야당 측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특검과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 사건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예비음모 수사 일명 ‘이석기 사태’ ▲통진당에 대한 정부의 정내해산심판 청구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정신 원로신부의 원경도 포격 발언에 대한 여론의 맹공과 수사 착수 등으로 이어지면서 정국은 애초와는 다른 모습으로 전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여론은 이 사안을 모두 ‘중북’ 논란으로 이끌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6일 “애초 야권에 유리하게 형성된 대치구조가 갈수록 여권에 유리하게 변형돼가고 있다”며 “일부는 여권의 기획으로, 또 일부는 우연처럼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여기에 일부 보수언론과 극우보수단체들이 적절하게 개입하면

서 ‘중북프레임’을 가동,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고 해석했다.

◇계속되는 여야 대립=새누리당은 이날도 박 원로신부의 발언을 거듭 성토했다. 대야(對野)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사제단 등을 ‘신(新) 야권연대’의 틀로 끌어들이 민주당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하며 압박을 계속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정치단체가 된 지 이미 오래 전 일”이라며 “‘중북’의 길을 뚫고 있는 신앙 정체가 무엇인지 국민은 종교 제대(祭臺) 뒤에 숨어서 얘기하지 말고 뚜렷이 실체를 드러내고 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여권의 초강경 대응을 ‘중북몰이’ 바람을 일으켜 야권의 발목을 잡고 정국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하

며 반격에 나섰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제단 시국미사에 관해 국민은 차분한데 정권만 호들갑을 떨고 있다”면서 “세간에서 떠들듯 지금 문제는 집권 여당이 주장하는 ‘중북’ 문제가 아니라 ‘중북(從北)’의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닌가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호 정책위 수석부대표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서 유신 독재의 그림자가 느껴진다”면서 “비판을 ‘중북’으로 몰아 분방을 전도하려는 시도는 더 큰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초선의원 34명은 성명을 내고 “공안통치가 다시금 부활하려고 꿈틀거리고 있다”며 “종교의 자유까지 유린하는 반헌법적 발상이 ‘이명박근혜’(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기저에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pkp@kwangju.co.kr

YS 아들 김현철 “이 정권 공안에서 시작해 공안으로 끝날 것”

“수세 몰리면 중북딱지”

김영삼 대통령 차남 김현철씨가 26일 “이 정권은 아무래도 공안에서 시작해 공안으로 끝날 것 같다”며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김씨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좁 수세에 몰릴 듯 싶으면 그저 중북딱

지나 불어서 빠져나가려 한다”며 박창신 원로신부에 대한 여권의 공세를 힐난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경제 살리고 국민통합한다더니 그저 반대와 죽이기에만 열을 내네”라며 “하지만, 잠시 속일 수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순 없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새누리당 4·11

공전에서 낙선한 뒤 탈당하면서 여의도연주소 부소장직도 함께 사퇴했다.

김씨는 지난해 대선 직전에는 “혹독한 유신 시절 박정희와 박근혜는 아버지와 딸이 아니라 파트너로서 이 나라를 얼음 제국으로 만들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이번 선거는 민주세력이 이겨야 한다”는 글을 올려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다.

김씨는 또 최근 동교동계 인사들과도 자주 교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에는 광주를 방문, 지인들과 무등산 산행을 하는 등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박지경기자 jpkp@kwangju.co.kr

우리 집만의 “행복한 특권”

다자녀 행복카드

전라남도에서 양육비 경감을 위해 드리는 문화·경제적 할인 혜택

<http://jnhappy.bccard.com>

BC카드 ☎ 1588-4000 농협 ☎ 1588-6000

☎ 061-286-5742

- 연회비 평생 면제 및 GS칼텍스 주유소 이용시 리터당 80원 TOP포인트 적립
- CGV, 롯데시네마, 프리머스 현장 구매 건당 1,500원 할인(월2회·연52회)
- 농협 하나로마트 등 판매장 이용시 5%할인(월2회·1회 최대 5,000원 할인)
- 유치원, 예체능학원 등 학원업종 이용시 10%할인(월2회·1회 최대1만원)